

# 분단 70년 통일 분야 연구: 동향과 과제

전 현 준\*

- |                      |                    |
|----------------------|--------------------|
| I. 서론                | IV. 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
| II. 발간 유형 및 연도별 연구동향 | V. 냉전·탈냉전기 연구동향 분석 |
| III. 정부별 연구동향 분석     | VI. 결론             |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통일 분야 연구가 어떤 추세(trend)를 보이고 있는가를 연구물의 계량 분석을 통해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단행본, 등재(예정)지, 학위논문 등 3,000여 편이다. 분석 결과, 통일 정책 분야가 1,235편(39%)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문화 분야가 841편(26.6%)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에 185편이 출간되었다. 통일문제 관련 논문은 1,753편이 실린 등재(후보)지가 1위를 차지하였다. 정부별로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773편이 발간되어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 연구가 경제 분야보다 많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정치학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도 통일문제 연구가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 전반적으로 통일 관련 연구가 점차 줄어가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좀 더 현실적인 연구를 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주제어:** 통일문제 연구 추세, 계량 분석, 통일문제 연구 분야의 다양화, 통일문제 연구 관심도 저하

## I. 서론

### 1. 연구 목적

2015년은 일제로부터 해방과 함께 민족 분단이 이루어진 7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비록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해방된

\*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조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며 기뻐했다. 그러나 그 청사진은 해방된 한반도가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분할됨으로써 무참히 좌절되었다. 국토 분단을 막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은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과 명사들 간 비타협적 태도로 인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3년간의 통일국가 건설 노력은 1948년 8월과 9월 남북한에 각각 다른 국가체제가 등장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남북한 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유력 정치인들은 서로 자기가 선호하는 이념 하에 자기중심의 정부가 수립되기를 희망하였다. 심지어 남북한의 유력 지도자였던 이승만, 김일성 등은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 불사를 공공연히 언급하였다.<sup>1</sup> 드디어 북한의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무력남침을 감행하였다. 남한의 이승만은 기왕에 유엔(UN)의 힘을 빌려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압록강까지의 북진을 주장하였다.<sup>2</sup> 그러나 1950년 10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6·25 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되었고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채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3년간의 동족상잔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백만 명의 인적 피해는 물론 남북한 주민들은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 복수심, 불신 등을 갖게 되었다. 남북한 각각은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상대방을 타도하기 위한 무력 및 체제경쟁으로 인해 상호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커지는 악순환(vicious circle)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분단체제는 더욱 고착화되었고 구조화되었다.<sup>3</sup> 남북한의 어느 지도자도 감히 상대방을 용서하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공식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주장되었다. 북한은 ‘연방제식’ 통일<sup>4</sup>을, 남한은 ‘연합제식’ 통일<sup>5</sup>을 주장하였다. 시대와 정부에 따라 강조점은 약간씩 달랐지만 외형적으로 남북한은 공히 평화통일을 절대적 가치로 상정하였다. 이승만 주도의 미군정 하에서 제정된 1948년 7월 제헌헌법 제6조 1항에도 ‘침략전쟁 반대’

<sup>1</sup> 김일성 발언은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p. 139 참조; 이승만 발언은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p. 13 참조.

<sup>2</sup>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대해서는 홍석률,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냉전의교정책,” 『한국사연구』, 제85호 (한국사연구회, 1994), pp. 137~180 참조.

<sup>3</sup> 차영구·황병무,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오름, 2009), p. 315.

<sup>4</sup> 고유환, “남북한 통일전략과 통일방안의 접점: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조사연구』, 제5권 제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1), pp. 84~107.

<sup>5</sup> 자세한 내용은 박종철 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참조.

를 명기해 놓았다.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헌법에 평화통일을 명기해 놓고 있다. 물론 평화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경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sup>6</sup>하는 것이고, 남한의 경우 ‘전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화’<sup>7</sup>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과감한 이념적 양보와 타협이 없는 한 언제든 전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형국이 조성되었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학문적 영역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다만 남북통일 분야는 정부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이념의 문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sup>8</sup> 지식사회학(sociology of knowledge)적 관점에서 볼 때 ‘존재 피구속성’을 가진 연구자들은 정부 및 구조, 다수 국민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통일문제 연구는 정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성 여부, 그 결과로서의 합의 도출 여부, 세계사적 정치변동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통일문제 연구의 불모 시기가 있었고, 백화제방의 시기가 있었다.<sup>9</sup> 특히 1989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부터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맞추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도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통일문제 연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통일 실현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다. ‘텍스트(text)’가 ‘컨텍스트(context)’를 능가할 못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이유는 통일문제가 세계사적 구조, 핵심 엘리트의 의지, 국민적 여론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통일담론’이 ‘통일현실’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 이는 통일연구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 배경이기도 하고 국민의 통일 무관심을 관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사구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sup>10</sup>

본 글은 해방 이후 70여 년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생산된 연구 논문, 박사학위 논문, 단행본 등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계량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본 글은 시대별, 정부별로 수행된 연구 주제의 추이와 그 이유를 간단히 분석한다.

<sup>6</sup> 2012년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 참조.

<sup>7</sup>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이념에 대해서는 허문영·이정우,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참조.

<sup>8</sup> 김용현, “통일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6호 (1996), p. 37.

<sup>9</sup> 한국의 통일정책 역사에 대해서는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변천사』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8) 참조.

<sup>10</sup> 조민,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 『통일연구논총』, 제17권 1호 (2008), pp. 1~26.

## 2. 선행연구 고찰

통일 관련 주제에 대한 통계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주하여 “통일 관련 연구의 현황과 과제(2015, 근간)”<sup>11</sup>라는 연구성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는 통일 관련 연구성과들을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통계 처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내용까지 분석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모델일 수도 있다. 그 외에 분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이기는 하지만 “통일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관련한 몇몇 연구성과가 나와 있다. 안병영의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1977)”<sup>12</sup>, 박순성·최진욱의 “통일논의의 변천 과정(1993)”<sup>13</sup>, 유호열의 “통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1996)”<sup>14</sup>, 김용현의 “통일연구의 현황과 과제(1996)”<sup>15</sup>,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의 “통일연구의 현황과 학제적 통일학의 모색(2006)”<sup>16</sup>, 김학성의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2008)”<sup>17</sup>, 박명규의 “통일논의와 통일연구의 현주소: 담론의 산출과 학계의 역할(2008)”<sup>18</sup> 및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지수화의 방법론과 이론적 과제(2010)”<sup>19</sup>, 박형중의 “통일학과 시나리오 방법론(2009)”<sup>20</sup> 등이 그것이다. 한편 통일 관련 연구의 목록을 제시한 자료로는 통일부의 “통일부 30년사(1999)”<sup>21</sup>, 통일연구원의 “통일연구원 15년사(2006)”<sup>22</sup> 등이 있다.

위의 논문들 중 통일문제 연구의 현황, 변천, 과제 등을 제시한 연구물을 중심으로 종합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 첫째, 통일학에 대한 개념 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학은 당위성의 학문, 실제적·정책적 학문, 미래의 학문(미래학), 학제 간 학문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통일학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통일학 주제는 분단과 평화공존, 통일 대비, 통일한국의 미래상, 한반도의 불확실성, 남남갈등 해소 등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통일문제 연구의 주체를 밝히고 있다. 연구

<sup>11</sup> 한국학중앙연구원, 『통일 관련 연구의 현황과 과제』(근간)

<sup>12</sup> 안병영,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1호 (1977).

<sup>13</sup> 박순성·최진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민족통일연구원, 1993).

<sup>14</sup> 유호열, “통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기획세미나, 1996.12.5.).

<sup>15</sup> 김용현, “통일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6호 (평화문제연구소, 1996).

<sup>16</sup> “통일연구의 현황과 학제적 통일학의 모색,” 『남북한 통합과제와 통일연구』(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창립기념 학술 심포지움, 2006.5.18.).

<sup>17</sup> 김학성, “통일연구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sup>18</sup> 박명규, “통일논의와 통일연구의 현주소: 담론의 산출과 학계의 역할,” 『동아시아: 비교와 전망』 제6집 제3호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7).

<sup>19</sup> 박명규,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10).

<sup>20</sup> 박형중, “통일학과 시나리오 방법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9).

<sup>21</sup>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평화·화해·협력의 발자취 1969~1999』(서울: 통일부, 1999).

<sup>22</sup>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15년사』(서울: 통일연구원, 2006).

주체는 정부 또는 출연연구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이라는 주장이다. 넷째, 통일문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학 연구방법론은 주로 비교공산주의 연구방법론, 국제정치학적 방법론, (신)기능주의 통합방법론, 내재적·비판적 접근법 등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통일문제 연구 분야를 분류하고 있다. 통일문제 연구 분야는 대체로 통일정책, 통일방안, 남북한 정치·경제·사회·군사·행정·법제 통합, 통일국가 체제 등이라는 주장이다. 여섯째, 통일학 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있다. 통일문제 연구의 변천과정을 대체로 국제정치적 큰 사건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나누거나 주제별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일곱째, 통일학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통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지수 개발, 시나리오 기법 도입, 학제 간 연구, 탈이념·탈정책·탈정부·탈운동 연구, 젠더(gender)적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체적으로 통일 관련 연구동향과 과제를 다룬 연구물들은 연구동향, 연구 주제, 연구 발전 과제 등에 대해 기술적(descriptive), 분석적(analytical)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구물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data)적 분석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70여 년 동안 간행된 단행본, 일반 논문 및 박사학위 논문 등을 수집하여 그 내용의 빈도수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 3. 연구 및 조사 방법과 한계

#### 가. 연구 및 조사 방법

연구 방법은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이 아닌 문헌추출 방식의 하나로 조사 대상들을 군집화하여 연대별·분야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빅 데이터(big data) 분석기법은 아니지만, 통계 패키지를 통해 대상의 추세를 군집화하는 데 애용되는 분석기법<sup>23</sup>이다. 이 기법은 향후 심층연구를 위한 자료의 유용성과 개괄적인 분석을 하는 데 용이하여 선택되었다. 이는 기초 단계인 동시에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선행과정이 될 것이다. 통계를 이용한 분석기법은 질적

<sup>23</sup> 이 기법에 대해서는 Donald Campbell and Julian Stanley,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3); Fisher, R. A., *Statistical Methods for Research Workers*, 4th ed. (London, Oliver & Boyd, 1932); Stephen M. Stigler, *The History of Statistics: The Measurement of Uncertainty Before 190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등을 참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에 대해 캠벨(Campbell)은 실증 연구를 디자인하는데 단계별로 하는 것이 분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피셔(Fisher)는 통계방법에 대한 연구자의 자질에 대해 윤리적 접근 방법을 견지하였음. 현재 성행하고 있는 통계 방법은 위에 제시한 스티글러(Stigler)가 제시한 분류를 사용한 것이다.

분석에서 가려내지 못하는 부분을 일정한 범주 내에서 흐름과 함께 분류된 주제어를 중심으로 연구 당시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존재해야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이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조사 대상 선별을 위한 시간적 범위인 70년(1945. 8. 15.~2015. 4. 현재) 동안 이루어진 ‘통일 문제 연구’에 대한 조사량을 모두 아우르는 작업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이 주제에 대한 내용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조사대상 연구성과가 수천 건에 이르고 내용분석의 답론을 담아내기에 조사기간 또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흐름적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 자료 제공에 만족하고 자세한 내용 분석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겼다.

본 연구는 계량 분석을 위해 국내 연구동향을 한 눈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중 하나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sup>24</sup>를 통해 키워드를 사용하여 학위논문(석사학위 논문 제외), 국내학술지논문(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단행본 등 분류별 상세검색을 실시하여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방법을 통해 조사 대상인 RISS에서 수록하고 있는 모든 자료 중 ‘통일’에 관한 주제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 417개에 달하는 KCI 등재 및 KCI 등재후보지 수록 논문 및 단행본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조사방법은 단계별로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로서 RISS의 메인화면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통일정책’으로 검색하는 대신 조사 범위를 우선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박사학위논문, 단행본, 국내학술지검색을 선택한 후 검색어를 ‘통일’, ‘남북한’, ‘한반도’, ‘평화’ 등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검색하였다. 국내학술지의 경우 상세검색에서 조사 범위를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는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국내 연구동향을 살피기 위해 해외학술지와 석사학위 논문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2단계로서 제목으로 검색한 1단계와는 다르게 2단계에서는 요약문이나 주제어를 중심으로 ‘통일’ 및 관련 키워드를 추가 검색하였다. 관련 키워드로는 ‘남북한’, ‘한반도’, ‘정책’, ‘방안’, ‘통일 이후’, ‘통일 대비’로 재조사하여 1단계에서

<sup>24</sup> RISS는 교육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로 전국 738개 대학도서관과 777개 연구소 및 학회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물과 소장자료들을 전국대학공동목록(UNICAT), 학술정보수집시스템(dCollection) 등을 통해 수집하여,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대학 소장자료 5,150만 건, 국내 학위논문 120만 건, 국내학술지논문 380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riss.kr/AboutRiss.do>>. (검색일: 2015.4.10.).

확보되지 않은 샘플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조사 대상을 엑셀(Excel) 자료로 치환하여 조사 대상의 오류 위험을 방지하였다.

셋째, 3단계로서 RISS를 활용한 수집 외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개 기관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포함된 연구기관에서 공개·게시되어 있는 연구보고서 중 통일 관련 연구자료도 참고하여 선별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3단계로 수집된 조사 대상은 총 3,166개로 집계되었다. 총론 차원에서 조사 대상을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발간 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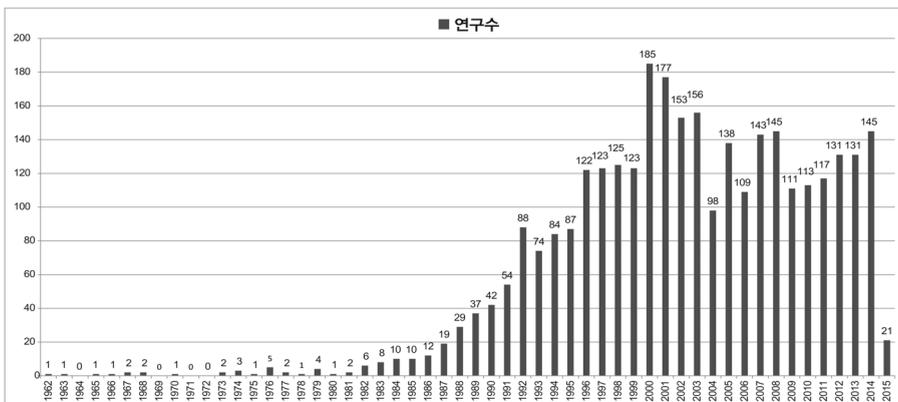
연구 분야		수	비율
등재 (후보)지	정책	649	55.4%
	사회문화	511	
	경제	283	
	군사안보	224	
	외교	86	
	소계	1,753	
단행본	정책	368	22.3%
	사회문화	147	
	경제	69	
	군사안보	64	
	외교	57	
	소계	705	
국책 연구 기관	정책	131	13.9%
	경제	121	
	사회문화	103	
	외교	46	
	군사안보	38	
	소계	439	
학위 논문	정책	87	8.5%
	사회문화	80	
	경제	48	
	군사안보	43	
	외교	11	
	소계	269	
합계		3,166	100%

<표 2> 연구 분야별 분류

연구 분야		수	비율
정책	등재(후보)지	649	39%
	단행본	368	
	국책연구기관	131	
	학위논문	87	
	소계	1,235	
사회 문화	등재(후보)지	511	26.6%
	단행본	147	
	국책연구기관	103	
	학위논문	80	
	소계	841	
경제	등재(후보)지	283	16.5%
	국책연구기관	121	
	단행본	69	
	학위논문	48	
소계	521		
군사 안보	등재(후보)지	224	11.7%
	단행본	64	
	학위논문	43	
	국책연구기관	38	
	소계	369	
외교	등재(후보)지	86	6.3%
	단행본	57	
	국책연구기관	46	
	학위논문	11	
	소계	200	
합계		3,166	100%

II장은 발간 유형별 분류로서 유형별 군집화된 통일 관련 연구물은 ① 등재(후보)지 1,753편으로 55.4%, ② 단행본 705편으로 22.3%, ③ 국책연구기관 439편으로 13.9%, ④ 학위논문 269편으로 8.5% 등의 분포를 보였다. 네 가지를 분석 유형으로 선정한 이유는 RISS의 학술 관련 자료에 대한 분류 기준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다. II장에서는 전체 연구물의 연도별 추이를 알아보기 쉽게 연도별로 분류되어 <그림 1>로 표시되었다.

<그림 1> 연도별 연구 총수



III장에서는 정부별 연구동향이 분석되었다. 통일정책은 정부별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연구성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자료 부족으로 이승만 정부는 제외되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 등이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박순성·최진욱은 통일논의 생성기, 공백기, 해빙기, 개화기 등 4개 시기로 분류하였고,<sup>25</sup> 김학성은 통일연구의 불모기, 통일연구의 맹아기, 통일연구의 활성화, 통일연구의 체계화 등 4개 시기로 분류하였다.<sup>26</sup>

IV장의 분야별 군집화는 <표 2>에서 보듯이 ① 정책 분야 1,235편(39.0%), ② 사회문화 분야 841편(26.6%), ③ 경제 분야 521편(16.5%), ④ 군사안보 분야 369편(11.7%), ⑤ 외교 분야 200편(6.3%)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기준을 5개로 선정한 이유는 조사 대상이 너무 많을 경우 추세 분석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

<sup>25</sup> 박순성·최진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pp. 6~148.

<sup>26</sup> 김학성, “통일연구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 pp. 205~215.

나라 융복합 연구에 대한 분류를 모호하게 하므로 큰 범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IV장에서 5개 분류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 사항이 분류되었다. V장에서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통일문제 연구동향이 냉전기와 탈냉전기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 나. 조사 대상 선별과 그 한계

첫째, 북한연구소의 『북한』지(紙) 등을 비롯한 비(非)학술 잡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북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 조사 연구물도 제외되었다. ‘북한 연구동향’은 연구 주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 연구 실태까지 포함해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행본의 검색 시, 상세검색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기록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각종 학술회의 및 행사 관련 기록물 등이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검색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단행본 목록에서는 정부기록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및 행사 관련 기록물 등이 모두 제외되었다. 단행본 가운데 시리즈 형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표기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중복 검색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바, 이것도 제외되었다.

셋째,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모두에 걸쳐 1990년대 이전 자료의 경우 서지정보가 한문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검색할 경우 검색결과에서 빠지게 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한문으로 기재된 연구물에서 오기 및 중복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서명뿐만 아니라 저자, 출판사 등에서도 오기와 중복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목차 및 주제어, 출판년도 등의 서지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따라서 한문으로 대조 및 확인을 통해 목록에 포함시켰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넷째, 등재(후보)학술지의 검색 시에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상세검색을 선택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등재(후보)학술지가 아닌 각 학교의 연구소 출판물, 월/계간 출판물 등은 검색에서 제외되었다. 등재(후보)학술지 검색 시 검색결과에 함께 나오는 학술기사, 서평 등은 연구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되었다. 목록 선정과정에서 제목, 목차,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제목, 목차, 주제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통일과 관련이 있는 주제들의 경우

검색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어 이들 간접적 관련 주제는 제외된 경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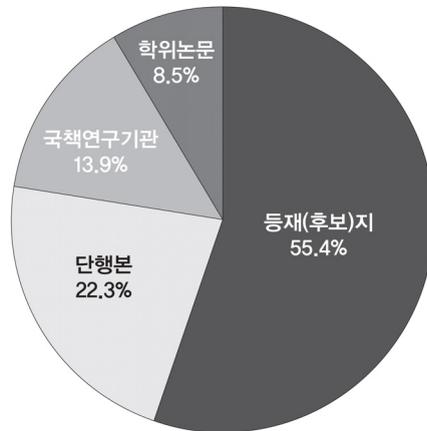
다섯째, 위와 같은 난점과 함께 원칙적으로 RISS에 등재되지 않은 자료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2차적인 교차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가 학계에 발표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 II. 발간 유형 및 연도별 연구동향

### 1. 발간 유형별

<표 3/그림 2> 발간 유형별 연구 수 및 비율

연구 분야		수	비율
등재 (후보)지	정책	649	55.4%
	사회문화	511	
	경제	283	
	군사안보	224	
	외교	86	
	소계	1,753	
단행본	정책	368	22.3%
	사회문화	147	
	경제	69	
	군사안보	64	
	외교	57	
	소계	705	
국책 연구 기관	정책	131	13.9%
	경제	121	
	사회문화	103	
	외교	46	
	군사안보	38	
	소계	439	
학위 논문	정책	87	8.5%
	사회문화	80	
	경제	48	
	군사안보	43	
	외교	11	
	소계	269	
합계		3,1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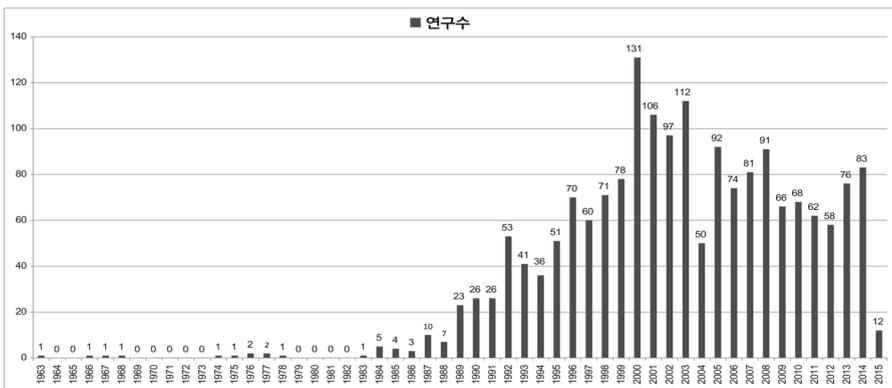
<표 3/그림 2>에서 보듯이 연구물은 등재(후보)지가 가장 많은 성과물을 냈다. 그 이유는 조사 대상 등재(후보)지가 417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95년을 기점으로 대학은 물론 국책연구기관까지 업적평가제도가 강화되면서 등재(후보)지에 대한 논문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술지들이 학술진흥재단(연구재단)의 등재지 등록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재(후보)지에 많은 통일 관련 논문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

단행본이 705권이냐 생산되었는데, 여기에는 통일문제 관련 출판사의 증대도 한몫을 하였다. 통일 관련 출판사들은 보다 많은 책의 출판을 위해 학자들을 추동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 주로 설립된 28개의 국책연구기관들도 통일문제 대한 연구를 증대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활발해지면서 통일 관련 연구가 활발해 졌다. 그 선두에는 1991년에 창설된 『통일연구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 또한 269편이나 생산되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 세계사적 변화와 함께 통일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당시 젊은 연구자들의 통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각 분야에서 교수나 통일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통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 2. 연도별 연구성과

### 가. 등재(후보)지

<그림 3> 연도별 등재(후보)지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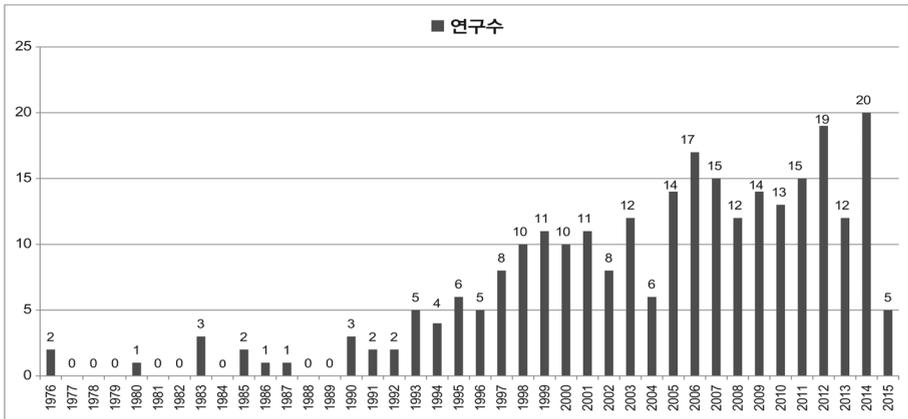
<그림 3>에서 보듯이 통일 관련 연구는 55% 정도가 등재(후보)지에 실렸는데, 특히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2000년에 131건으로 게재 연구 논문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후 2001~2003년에 등재(후보)지에 논문이 많이 게재된 이유는 「통일연구원」과 「북한연구학회」 등이 집중적으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 대해 연구하였기 때문이고, 특히 2003년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이 도출된 2005년에 통일 관련 논문이 증대되었고, 2007년 10월 ‘10·4 선언’이 있었던 다음 해인 2008년에도 논문 수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통일 관련 연구가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발효되는 해에도 나타났다. 논문 수는 1991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 나. 학위 논문

<그림 4> 연도별 학위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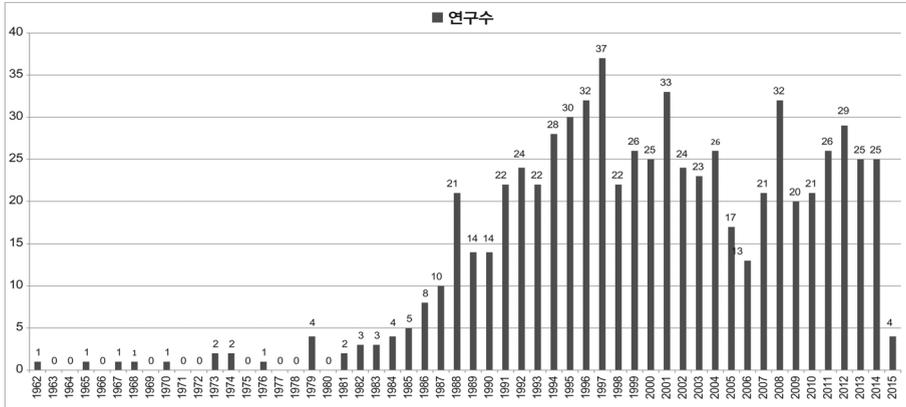
<그림 4>에서 보듯이 박사학위 논문 수는 199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20편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통일문제 전문가의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증가는 김대중 정부 출범과도 맞물려 있다. 특징적인 것은 통일정책 관련 학위논문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사회문화 관련 학위논문 수도 못지않게 많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통일문제가 정치학이나 정책학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여타 학문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일연구 영역의 ‘탈정치학’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통일연구의 학문적 저변이 튼튼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통일문제가 정치 영역에서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보다 더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의 경우 통일경제 관련 학위자 수가 정책이나 사회문화 분야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한 경제학 연구자들의 관심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2012년에 학위논문 수가 19편에 달한 이유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논문 심사가 연기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학위논문 수가 20편에 달한 이유는 학위논문 준비 기간을 최소 3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일 사망’ 여파로 ‘북한붕괴론’이 지속된 가운데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부 등장이 등장함에 따라 ‘통일 이후 대비’ 차원에서 통일정책 및 군사통합에 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다. 단행본

<그림 5> 연도별 단행본 수



<그림 5>에서 보듯이 통일 관련 단행본은 198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 이후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민주화 바람으로 인해 ‘출판활성화 조치’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1977년 이후 판금된 도서 650종 중 431종이 해제되었다. 물론 북한 원전인 ‘특수자료’도 일부 해제되었다. 특징은 남한 출판사들이 북한 ‘원전’을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여 발행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 발행이 중지되었다. 어쨌든 남한 민주화 결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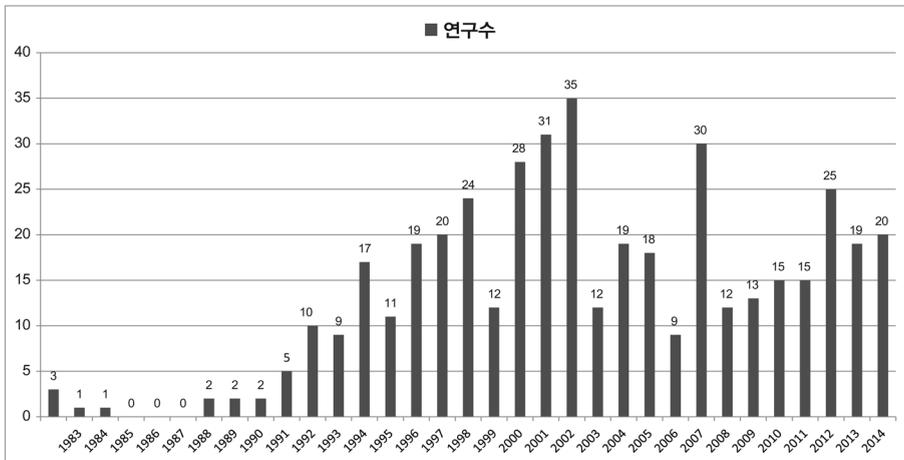
1988년에 많은 통일 및 북한 관련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또한 1988년은 북방정책 내용을 담은 ‘7·7 선언’이 발표된 해였고 출판계는 이의 영향도 받았다.

물론 단행본은 연구 시점과 발행 시점에 시차가 존재함으로 이를 감안하였을 때, 노태우 정부 이전에 수행되었던 연구사업 결과물이나 정책보고서들을 모아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면, 당시 냉전기의 종식을 알리는 국제정치 환경에 비추어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사회주의진영 국가들에 대한 당시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담론이나 주장에 머물렀던 생각들이 연구결과물이 되어 대거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김영삼 정부가 끝나는 1997년에 가장 많은 단행본이 출판된 이유는 각 대학의 통일 관련 연구소들이 유난히 많은 단행본을 내놓았기 때문이었다. 대학 연구소들이 이 시점에 단행본을 많이 발간하였던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2001년, 2008년, 2012년에 상대적으로 많은 단행본이 출간된 것도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다. 다만 2012년의 경우 ‘통일한국’에 관한 책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진보정권’ 10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연구자들이 출판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 라. 국책연구기관

<그림 6> 연도별 연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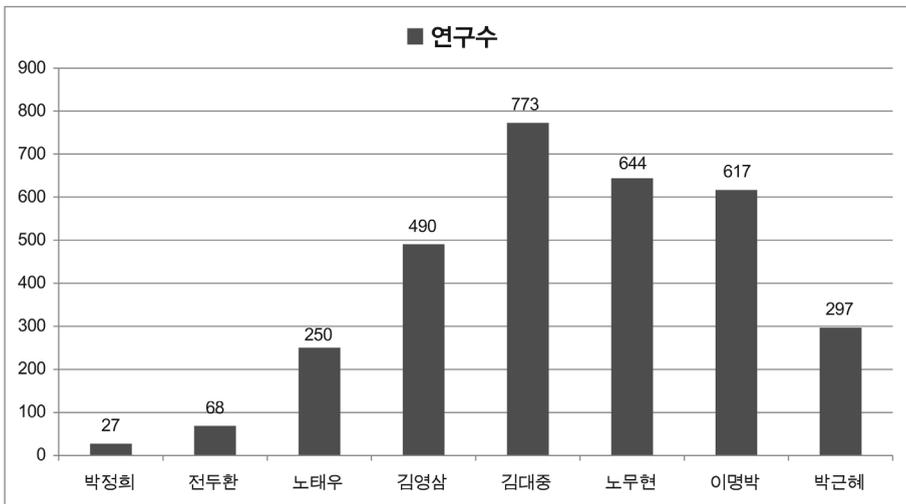


<그림 6>에서 보듯이 1991년 「통일연구원」이 설립되면서부터 통일 관련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재정 지원을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따라

서 정부의 특정한 정책에 맞는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 관련 연구가 많았다. 연구결과물들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을 포함하여 2001년, 2002년에 유례없이 많은 성과물을 내었다. 김대중 정부가 끝나는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끝나는 2007년,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2012년에 연구성과물이 많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정부 마지막 해에 많은 연구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온 이유는 하나의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결산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이 2002년에는 「통일연구원」이 ‘남북한 통합’, 2007년에는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통일 대비’ 연구가 많았다. 이것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 Ⅲ. 정부별 연구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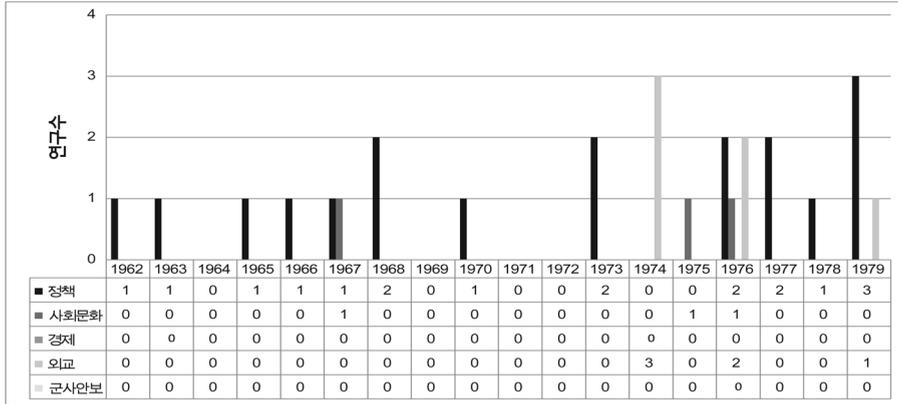
<그림 7> 역대 정부별 통일 관련 연구성과 수



<그림 7>에서 보듯이 역대 정부에서 통일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대중 정부로서 773건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을 폈고 그에 따라 통일정책 분야는 물론 사회문화,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통일 관련 연구가 증대하였다. 특장은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통일 관련 연구가 점진적으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노무현 정부(644건)와 이명박 정부(617건)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다.

## 1. 박정희 정부(1962~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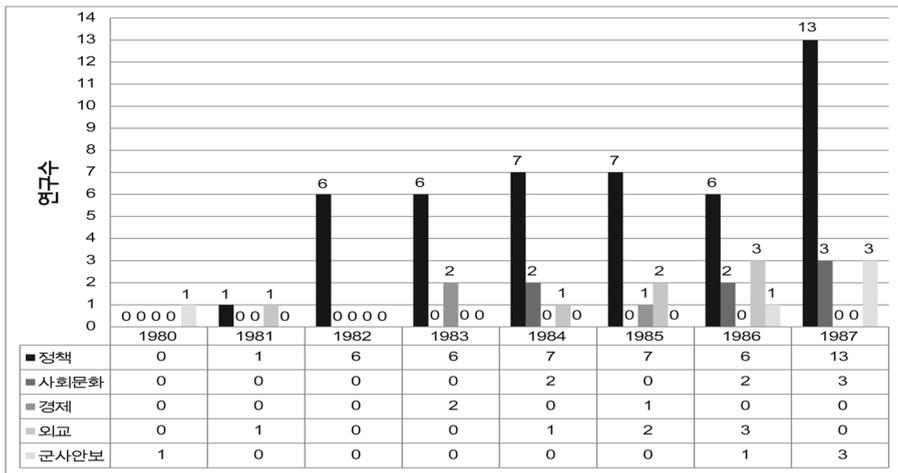
<그림 8> 박정희 정부 시기 연구 수



<그림 8>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연구성과는 27개에 불과하였다. 그것도 정책 분야에 연구의 66.7%가 몰려 있다. 박정희 정부 시기 연구성과가 미미한 이유는 박정희 정부가 ‘선 건설, 후 통일’론을 국시로 삼았고 통일연구가 주로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1969년에 『국토통일원』(통일부)이 창설되었으나 주로 정부간행물을 발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 2. 전두환 정부(1980~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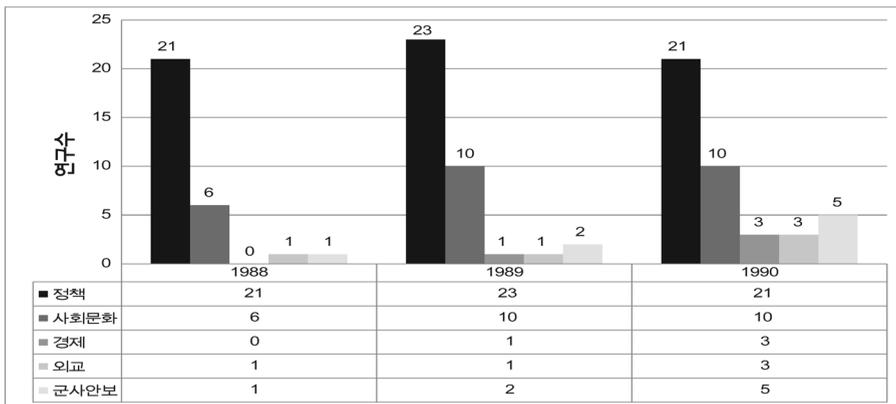
<그림 9> 전두환 정부 시기 연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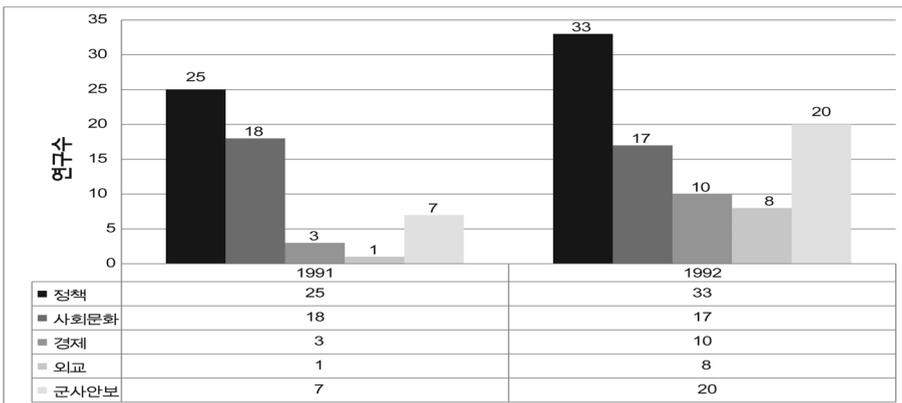
<그림 9>에서 보듯이 전두환 정부 당시의 통일 관련 연구는 역시 통일정책 관련 연구가 67.6%를 차지했다. 전두환 정부 초기에는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가 많았으나 후반기에는 ‘한국의 통일정책’이 많았다.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인 ‘민족 화합민주 통일방안’에 대한 것은 극히 드물었다. 1987년에 19건에 이르는 연구가 진행된 것은 대학 연구소들이 ‘한국의 통일’에 관한 연구를 집중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남한 내 민주화 운동과는 별개의 것이었다. 민주화 운동의 효과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나타났다.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1985년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등도 연구결과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 3. 노태우 정부(1988~1992)

<그림 10> 노태우 정부(냉전 이전) 시기 연구 수



<그림 11> 노태우 정부(냉전 이후) 시기 연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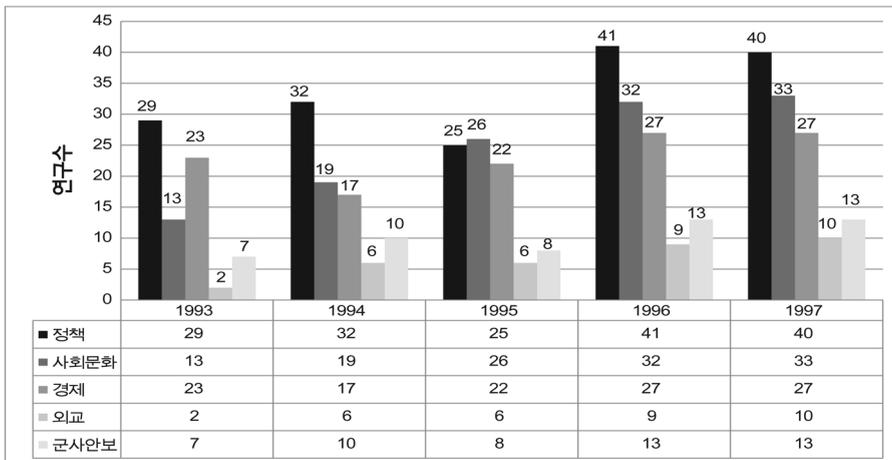


노태우 정부 시기는 냉전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보듯이 정책 분야가 123편으로 가장 많다.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통일정책’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전두환 정부는 각각 18편, 46편에 그치는 것으로 볼 때, 당시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물이 양적으로도 많이 양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정희 정부 시기 27편, 전두환 정부 시기 68편에 비해 노태우 정부는 250편의 성과물을 보이고 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이전(1988~1990)과 냉전 이후(1991~1992)를 비교하였을 때, 냉전 이후시기인 1991년 이후에는 ‘군사안보’, ‘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에 대한 연구가 대폭 증가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탄생한 노태우 정부는 이념서적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고, 1988년 ‘7·7 선언’을 통해 북방정책을 표방하였다. 이후 통일 관련 연구는 ‘르네상스’를 맞이하였다.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되었고 통일방안과 관련한 연구가 많아졌다. 이 시기 역시 대학 통일문제연구소들이 연구에 앞장섰다. 국책연구원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 4. 김영삼 정부(1993~1997)

<그림 12> 김영삼 정부 시기 연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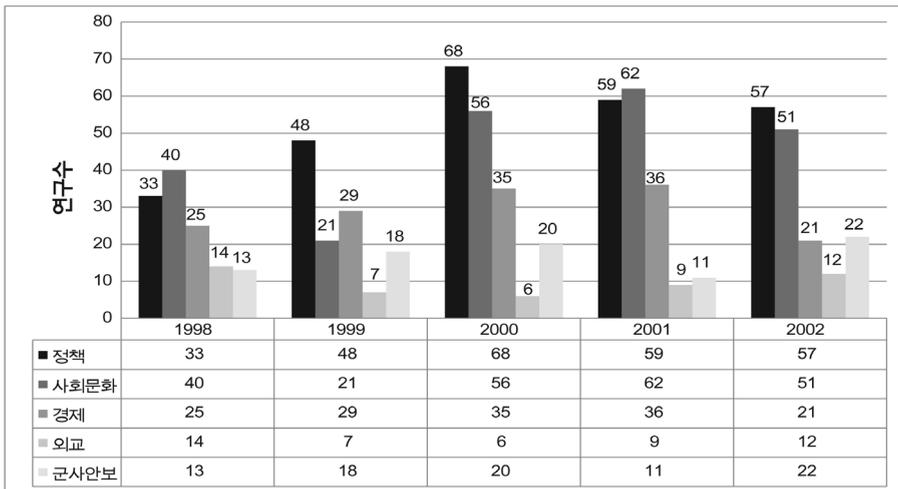
<그림 12>에서 보는 것처럼 김영삼 정부 당시의 통일정책 관련 연구는 총 490편이 조사되었다. 이 시기에 등재지를 비롯한 등재후보지를 기준으로 정책 분

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경제 및 군사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균형 있는 통일정책 연구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91년에 출범한 「통일연구원」을 필두로 각종 정부출연 연구원이 생긴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1994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가 설치된 이후 국내 여러 대학에 북한학과가 설치되었고 1996년 12월에는 「북한연구학회」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학자들의 수적 증가를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연구물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실시한 북한 원전 해금과 관련하여 많은 신진학자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정책 분야의 경우 1996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996년 41편(전년 대비 60% 증가)을 필두로 1997년 40편의 연구물들은 북한 체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북한붕괴론’이 풍미한 시기로서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은 이를 더욱 부추겼다. ‘통일 대비’ 연구가 많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경제 관련 연구가 노태우 정부 시기 14편에서 김영삼 정부 시기 116편으로 폭증한 것이다. 그 이유는 김영삼 정부 등장 시기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정치 상황 악화, 그로 인한 남북 관계 악화 등의 악재가 있었지만 ‘(주)대우’ 등 많은 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북 간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5. 김대중 정부(1998~2002)

<그림 13> 김대중 정부 시기 연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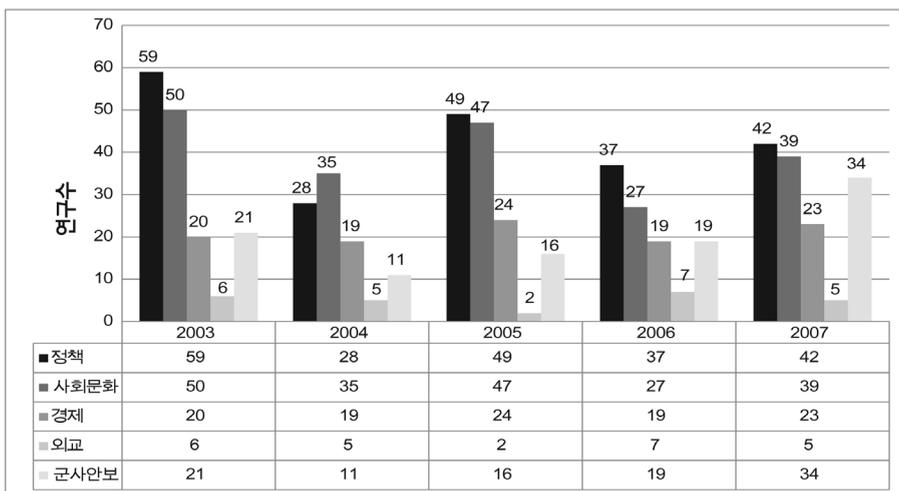


<그림 13>에서 보듯이 김대중 정부 하에서 통일 관련 연구가 폭증하였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야 했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통일철학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보수층은 물론 북한까지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대북 ‘햇볕정책’을 고수하였다. 그 성과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당시의 통일정책 관련 연구는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물들을 낳았다. 연구 분야는 ‘대북정책’ 관련 부문이 주류였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총 490편의 연구성과물들이 등장한 반면,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각 분야별 고른 연구성과물들의 출현으로 773편의 성과물이 나왔다. 특히 이 시기에는 『통일연구원』 등과 같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출현과 각 대학의 관련 학과와 커리큘럼이 등장하면서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들의 양적 성장에 힘입어 많은 연구성과물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전 정부 대비 정책 분야 63%, 사회문화 분야 53%, 경제 분야 79%, 군사안보 60%, 외교 분야 60%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초가 학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볼 수 있다.

## 6. 노무현 정부(2003~2007)

<그림 14> 노무현 정부 시기 연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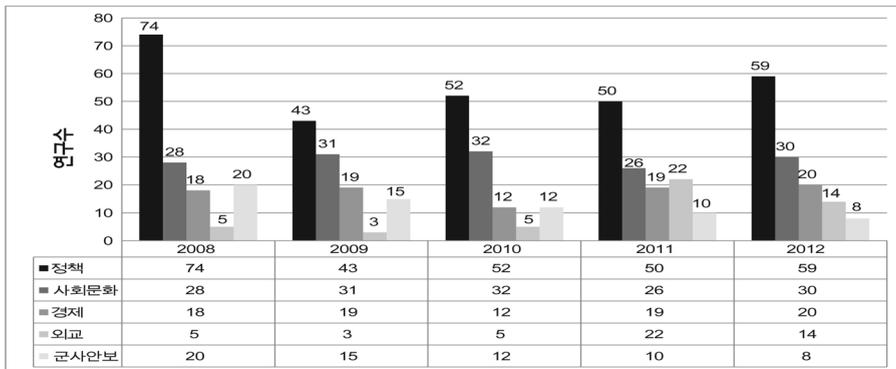


노무현 정부 당시의 통일정책 관련 연구는 김대중 정부와 수치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연구성과가 감소하였다. <그림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군사안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연구성과가 줄어들었다. 정책 분야는 50편(19%), 사회문화 분야는 32편(14%), 경제 분야 41편(28%), 외교 분야 23편(48%)이 감소하였다. 유일하게 군사안보 분야는 84편에서 101편으로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전 정부 대비 17%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동향을 보인 것은 2002년 10월 ‘제2차 핵위기’ 이후인 2003년 1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영변 핵 시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플루토늄 확보와 핵 개발에 들어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북핵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이것은 2005년 9월의 ‘9·19 공동성명’과도 관계가 있다. 특히 2003년에 통일정책 관련 연구가 많았던 것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김대중 정부와 비교하여 연구결과물 수가 축소된 것은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연구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북핵 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남북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동반해서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7. 이명박 정부(2008~2012)

<그림 15> 이명박 정부 시기 연구 수



<그림 15>에서 보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당시의 통일정책 관련 연구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수치적으로는 많은 감소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 분야는 215편에서 278편으로 23%, 외교 분야는 25편에서 39편으로 36%가 각각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가 198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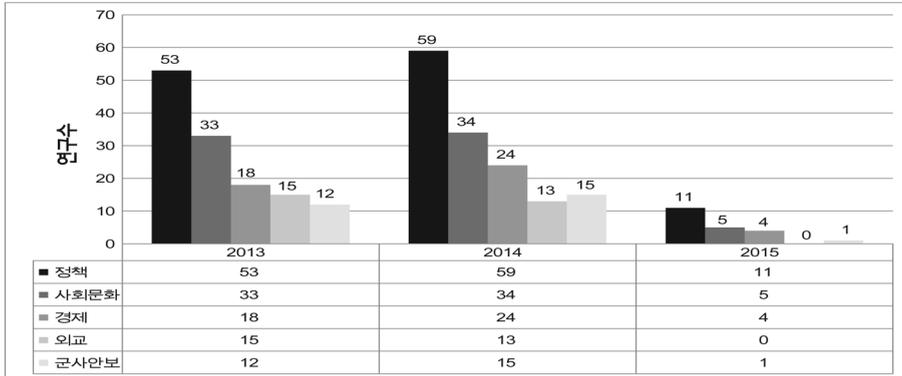
에서 147편으로, 경제 분야가 105편에서 88편으로 각각 26%, 16%가 감소하였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진보정권 10년’과는 달리 대북 ‘압박정책’을 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대북정책은 ‘선 핵폐기’를 의미하는 ‘비핵·개방·3000’이었다. 남북관계는 악화되어갔고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박왕자 피살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연구 분위기도 저하된 가운데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였고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가 발동되었다. 자연스럽게 경제 분야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연구도 악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통일 관련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진보정권 10년’과는 다른 정부가 등장한 관계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시기에 재등장한 ‘북한붕괴론’으로 인해 평화체제 문제, 북핵 문제 등에 관한 연구도 많았다.

## 8. 박근혜 정부(2013~2015.4)

<그림 16> 박근혜 정부 시기 연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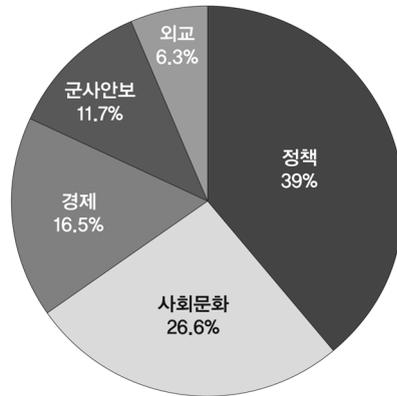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서 같은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와는 약간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2년 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특징을 발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림 16>에서 보듯이 통일정책 관련 연구는 2013년부터 2015년 4월 현재 28개월 동안 총 297편의 연구물이 생산되었다. 비교 기간이 상이하여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 연구동향은 비교적 이명박 정부와 같은 비율로 연구결과물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각각 45.1%, 41.4%로 가장 많았고, 사회문화 분야 또한 23.8%,

24.2%로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외교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6.3%을 보였던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9.4%로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물들이 등장하였다. 수치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분야별 연구동향으로 보았을 때,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북한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변 4국 외교’, ‘공공외교’ 등에 대한 연구물들이 그 증거이다.

#### IV. 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표 4/그림 17> 5대 연구 분야별 성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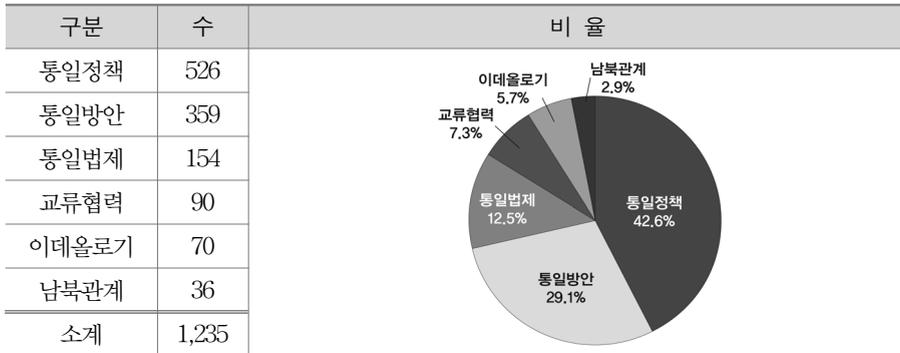
연구 분야		수	비율
정책	등재(후보)지	649	39%
	단행본	368	
	국책연구기관	131	
	학위논문	87	
	소계	1,235	
사회문화	등재(후보)지	511	26.6%
	단행본	147	
	국책연구기관	103	
	학위논문	80	
	소계	841	
경제	등재(후보)지	283	16.5%
	국책연구기관	121	
	단행본	69	
	학위논문	48	
	소계	521	
군사안보	등재(후보)지	224	11.7%
	단행본	64	
	학위논문	43	
	국책연구기관	38	
	소계	369	
외교	등재(후보)지	86	6.3%
	단행본	57	
	국책연구기관	46	
	학위논문	11	
	소계	200	
합계		3,166	100%



<표 4/그림 17>에서 보듯이 통일 관련 연구에서 정책 분야 연구가 1,235편으로서 전체 연구의 39%를 차지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정치학자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대학이나 각 연구소에 정치학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일정책, 통일방안, 남북관계,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향후 연구 분야를 보다 다양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통일 관련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1. 정책 분야

<표 5/그림 18> 정책 분야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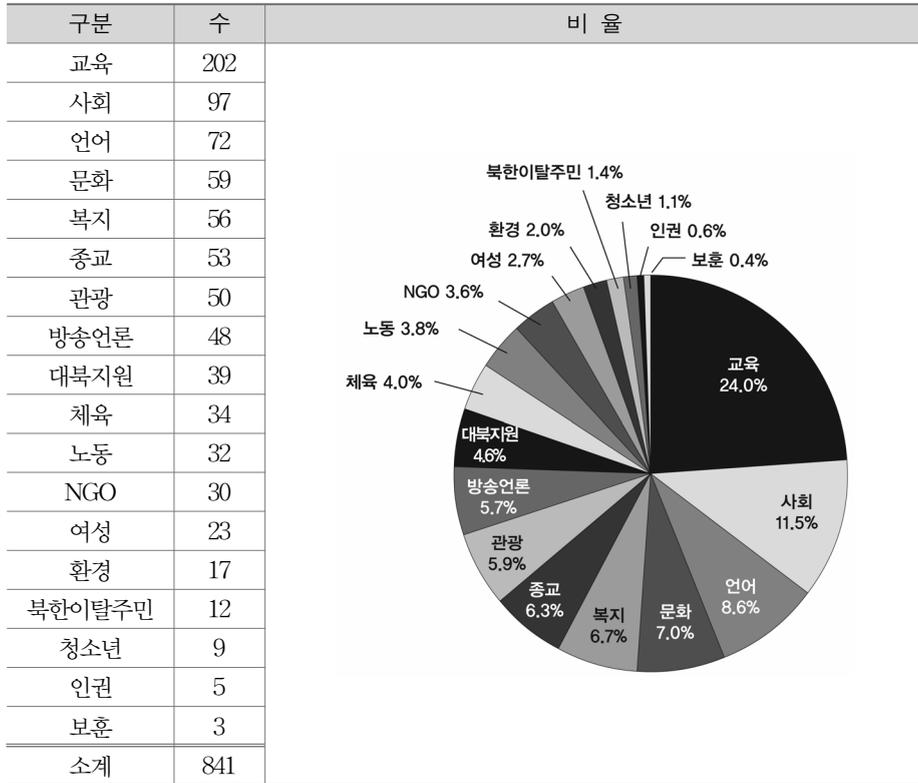


<표 5/그림 18>에서 보듯이, 정책 분야에서는 통일정책 분야가 5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물론 대북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 정부가 추진하였던 대표적인 정책 즉, 햇볕정책, 포용정책, 비핵·개방·300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급속히 상승하였던 통일에 대한 기대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국민들은 물론 사업가 및 전문가들까지 다양한 대북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2000년에 68편으로 높은 이유는 6·15 공동선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되며, 2008년 74편으로 많았던 이유는 2007년 10.4 선언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방안이 343건을 차지한 것도 각 정부의 영향이 컸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민주 통일방안,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대중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등이 나오면서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

## 2. 사회문화 분야

<표 6/그림 19> 사회문화 분야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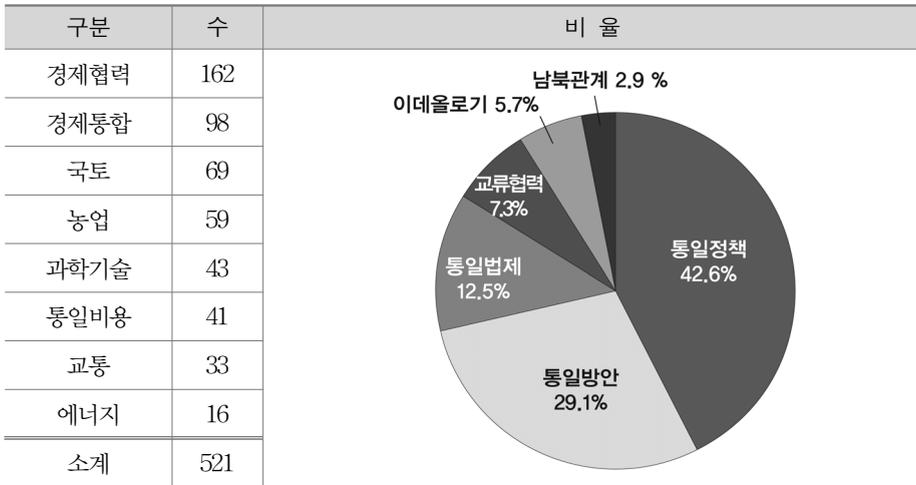
<표 6/그림 19>에서 보듯이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연구가 통일정책 분야 다음으로 많다. 사회문화 분야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그리고 통일문제 연구가 지나치게 정치학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던 터에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교육 분야가 202건으로 타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급속히 제기되었고, 청소년 대상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많은 이유는 통일운동과 사회통합과 관련한 연구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문화 분야는 <표 6/그림 19>에서 보듯이 그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다는 데 특징이 있다. 종교, 관광, 언론, NGO, 여성 등 통일연구의 불모지였던 분야가 점진적으로 관심 분야로 등장하여 통일준비 연구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중 정부 시기부터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가 급증한 것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정책 이외의 분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

### 3. 경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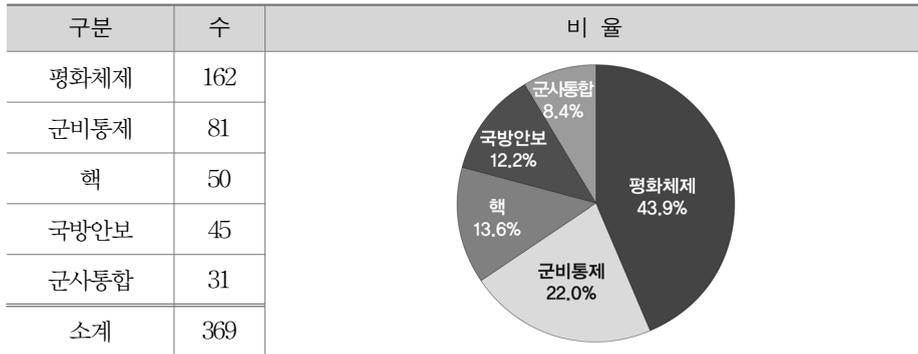
<표 7/그림 20> 경제 분야 연구성과



<표 7/그림 20>에서 보듯이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협력’ 관련 연구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북 경제협력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그 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 11월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을 필두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개성공단이 건설되었다.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군사 분야와는 달리 경제적 실리주의가 팽배하였다. 정치나 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야가 경제 분야였다는 점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일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빈도수는 현저히 낮은 반면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일 대비 차원의 경제통합 방안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이후에 경제 분야 연구가 많은 것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과 깊은 관련이 있다.

#### 4. 군사안보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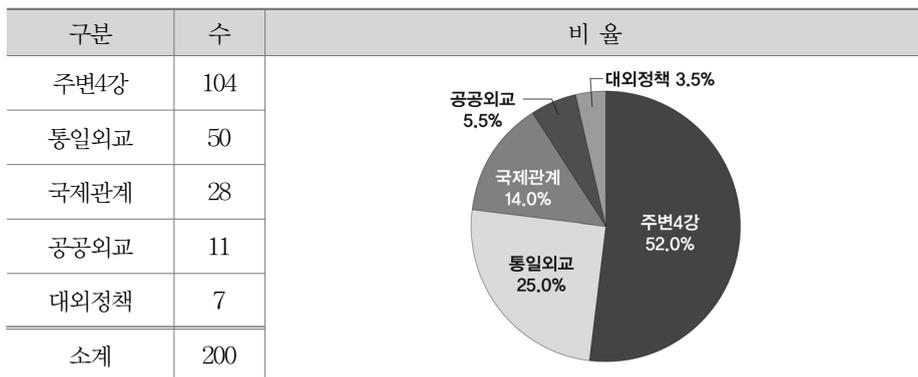
<표 8/그림 21> 군사안보 분야 연구성과



<표 8/그림 21>에서 보듯이 군사안보 분야는 평화체제 관련 연구가 162건으로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로 우리 민족의 과제였다. 따라서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1990년대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해결책으로 4자회담, 6자회담 등이 개최되었고 그 와중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대두되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명기되면서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논문이나 학위논문이 많아졌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국제법학자들도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에 군사안보 분야 연구가 34회로 급증한 이유는 남북관계 단절 및 북한붕괴론과 맞물려 한반도 평화체제, 군사통합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 5. 외교 분야

<표 9/그림 22> 외교 분야 연구성과



<표 9/그림 22>에서 보듯이, 외교 분야 연구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 4강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104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통일과정에서 주변 4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갈려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한반도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많았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맹방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연구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 4강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통일외교도 중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였다. 외교 분야 연구가 1998년, 2011~2014년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등장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이면서 북한붕괴론이 대두된 시기로서 북한붕괴 대비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이 강조되는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변 4강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V. 냉전·탈냉전기 연구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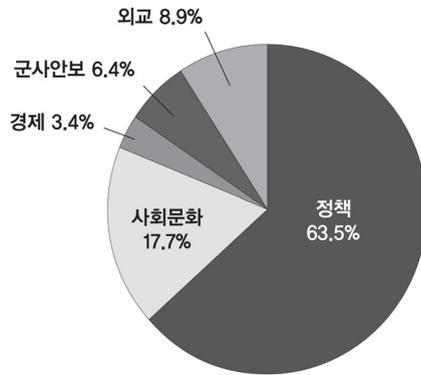
### 1. 냉전 기간(~1990) 연구

<표 10/그림 23>에서 보듯이 1945년부터 시작된 냉전 기간 동안에는 남북관계도 얼어붙었다. 그 동안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여 남북한 관계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남북한이 서로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이 자기 측에게 있다는 주장과 함께 체제경쟁에 몰입하였다.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내에서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남북한 양측은 경제발전이 우선이었다. 경제발전이 곧 체제우월성을 증명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월남 철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소위 ‘데탕트’가 시작되었고, 이 분위기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1970년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고 1972년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파기되고 말았다. 남북한은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을 지속하였다. 따라서 냉전 시기에는 분단과 통일 문제, 안보와 통일 문제,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연구 등이 주요 주제였다. 그리고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그 관련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통일 관련 연구 3,166건 중 203건에 불과하여 10%도 되지 않았다.

<표 10/그림 23> 냉전기간 분야별 연구성과

연구 분야		수	비율
정책	등재(후보)지	66	63.5%
	단행본	52	
	학위논문	6	
	국책연구기관	5	
	소계	129	
사회 문화	단행본	20	17.7%
	등재(후보)지	10	
	국책연구기관	5	
	학위논문	1	
	소계	36	
외교	단행본	10	8.9%
	등재(후보)지	5	
	학위논문	2	
	국책연구기관	1	
	소계	18	
군사 안보	등재(후보)지	10	6.4%
	단행본	1	
	학위논문	2	
	국책연구기관	0	
	소계	13	
경제	등재(후보)지	4	3.4%
	학위논문	2	
	단행본	1	
	국책연구기관	0	
	소계	7	
합계		203	100%



## 2. 탈냉전(1991) 이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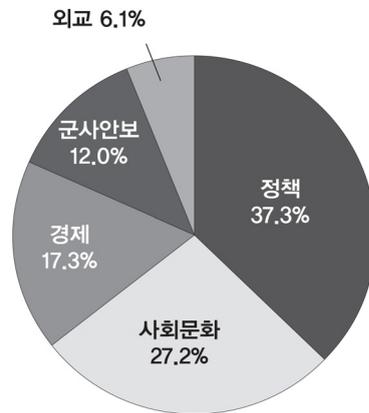
<표 11/그림 24>에서 보듯이 탈냉전 이후 통일 관련 연구는 2,963편으로서 냉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1991년 9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 남북통일 연구는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1989년부터 시작된 동유럽의 붕괴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대화가 시작되었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여파를 최소화하

고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대화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93년 제1차 핵 위기 발생,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1995~1997년까지 극심한 경제난(고난의 행군) 등이 일어나면서 ‘북한붕괴론’이 풍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대비’, ‘통일한국’, ‘통일 후’, ‘북한 변화와 통일’ 등의 연구가 많아졌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통일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11/그림 24> 탈냉전 이후 연구성과

연구 분야		수	비율
정책	등재(후보)지	596	37.3%
	단행본	302	
	국책연구기관	126	
	학위논문	81	
	소계	1,105	
사회문화	등재(후보)지	501	27.2%
	단행본	127	
	국책연구기관	98	
	학위논문	79	
	소계	805	
경제	등재(후보)지	280	17.3%
	국책연구기관	121	
	단행본	68	
	학위논문	46	
	소계	515	
군사안보	등재(후보)지	214	12%
	단행본	63	
	학위논문	41	
	국책연구기관	38	
	소계	356	
외교	등재(후보)지	81	6.1%
	단행본	47	
	국책연구기관	45	
	학위논문	9	
	소계	182	
합계		2,963	100%



## VI. 결론

본 연구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한국에서 통일문제 연구가 어떤 추세(trend)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대상은 단행본, 등재(예정)지, 박사학위논문 등 3,000여 편이다. RISS에 등재된 논문과 책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 자료가 빠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기술적(descriptive) 연구에서 벗어나 계량 분석(statistical analysis)의 방법을 통해 통일 관련 연구결과물들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발간 유형별로는 등재(후보)지가 1,753편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단행본 705권(22.3%), 국책연구기관(13.9%), 학위논문(8.5%) 등의 순위였다. 그 이유는 조사대상 등재(후보)지가 417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학교수는 물론 국책연구기관까지 업적평가제도가 강화되면서 등재(후보)지에 대한 논문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술지들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등록에 매진하였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등재(후보)지에 많은 통일 관련 논문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특징은 등재(후보)지의 경우 통일정책 분야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사회문화 분야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또한 학위논문이나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의 경우 통일정책 분야가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와 비교하여 많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연도별로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에 185편으로 가장 많이 산출되었다. 그 이유는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6·15 공동선언 이후 통일정책,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셋째, 분야별로는 통일정책 분야가 1,235편(39%)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통일정책은 물론 통일방안, 교류협력, 이데올로기 등이 포함되었다. 통일 관련 연구에서 정책 분야 연구가 1,235편으로서 전체 연구의 39%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통일연구의 학문 분야가 정치학에 많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통일문제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경우, 2015년 4월 현재 박사급 연구자 32명 중 26명이 정치학, 정치경제학, 국제정치학 분야 전공자로서 81%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정책 관련 연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정책 분야 연구는 경제 정책, 사회 정책 등 경제학자나 사회학자가 담당한 부문도 많았기 때문에 정치학 일반

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넷째, 정부별로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773편으로 가장 많았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통일 관련 연구가 폭증하였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통일철학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보수층은 물론 북한까지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대북 햇볕정책을 고수하였다. 그 성과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당시의 통일정책 관련 연구는 전두환 정부 및 노태우 정부와 비견할 만큼 많은 연구성과물들이 등장하였으며, 대북 정책 관련 부문이 주류였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총 490편의 연구성과물들이 등장한 반면,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각 분야별 고른 연구결과물의 출현으로 773편의 성과물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은 ①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경제 분야보다 많았던바, 이는 정치학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라는 점, ② 전반적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통일 관련 연구가 점차 줄어가는 추세가 나타났는바, 이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 등이다. 관련하여 향후 통일 관련 연구자들에게 한 가지 제언한다면 통일담론이나 당위론이 아닌 국민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통일 무관심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실사구시적, 실용주의적 연구를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다. 통일학은 ‘당위론’의 학문이기도 하지만 국내의 정치경제적 현실에 크게 영향을 받는 ‘현실론’의 학문이기 때문이다.

■ 접수: 4월 28일 ■ 심사: 5월 13일 ■ 채택: 6월 16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박순성·최진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박중철 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변천사』.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8.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차영구·황병무.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오름, 2009.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평화·화해·협력의 발자취 1969~1999』. 서울: 통일부, 1999.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15년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통일 관련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허문영·이정우.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0.  
 Campbell, Donald and Julian Stanley.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3.  
 Fisher, R. A. *Statistical Methods for Research Workers*, 4th ed. London, Oliver & Boyd, 1932.  
 Stigler, Stephen M. *The History of Statistics: The Measurement of Uncertainty Before 190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2. 논문

고유환. “남북한 통일전략과 통일방안의 접점: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조사연구』. 제5권 제1호, 2001.  
 김용현. “통일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6호, 1996.  
 김학성. “통일연구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박명규. “통일논의와 통일연구의 현주소: 담론의 산출과 학계의 역할.” 『동아시아: 비교와 전망』. 제6집 제3호, 2007.  
 \_\_\_\_\_.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 2010.  
 박형중. “통일학과 시나리오 방법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통일연구의 현황과 학제적 통일학의 모색.” 『남북한 통합과제와 통일연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창립기념 학술 심포지움, 2006.5.18.  
 안병영.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1호, 1977.  
 유호열. “통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기획세미나, 1996.12.5.  
 조 민.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 『통일연구논총』. 제17권 1호, 2008.  
 홍석률.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 제85호, 1994.

## 3. 기타자료

「대한민국 헌법」.  
 「조선로동당 규약」 (2012년 개정).

## A Review on Unification Field Studies of the Division of Korea for 70 Years: *Issues and Challenges*

*Hyun-Joon Ch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the unification studies for 70 years following the independence from Japan by using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s is required for effective research,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study was collected by multiple means and from multiple sources such as related books/book chapters, journal articles and academic theses (3,000 papers in total).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exploring the nature of the study and it is analyzed based on the related study areas of ‘unification policy’; and ‘social and cultural research’; as well as ‘economic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unification policy accounted for 39 percent of the study with 1,235 papers. It was followed by social and cultural research with 841 papers (26.6percent). The majority of the papers were published in 2000, the year which held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773 papers were published in Kim Dae-Jung regime. Among 3,000 papers, 1,753 of them were published in journals.

As a result, while the unification policy and unification plan papers take up the mainstream of the study, a sufficiently increased number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have been published when it was compared with economy-related one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tudies of the unification issues are being diversified in addition to politics as this paper demonstrated. However, the trend also shows that unification related studies have been decreased there after Kim Dae-Jung regime. Also, the interest in unification has been declined among schola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All the best future research will be to increase interests and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dialogue of the unification.

**Key Words:** Trend of Unification Studies,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Diversification of Unification Study, the Decline of Interest in Unification Issue.